

제1호

발행일 2025년 5월 30일

발행  아주통일연구소  
AJOU Institute for Unification

발행인 이왕휘



# Issue Brief

2025.05

연결지성과 융합연구로  
한반도를 디자인합니다

아통 칼럼

## 새 정부 대북정책의 첫 단추는 과거와 마주앉는 것

□ 연락사무소 폭파 5년, 소통 채널 복원의 의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 연구실장

6.3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권력의 쟁투적 관점에서, 최근 국내에 발간된 크리스 헤이즈의 <사이렌스 콜>의 소재인 유권자의 ‘주의력’을 사로잡기 위한 사이렌이 TV토론과 유세현장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분단되지 않은 것처럼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정쟁에 주의력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선거 막바지 들어 각 후보들 간의 공약 중 민생문제와 지역균형발전 이슈에 비껴나있던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 정책들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곧 새로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기대하는 이들의 시선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첫 일성에 쏠려있다.

마침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한반도 공약의 첫 번째는 남북 소통채널 복원 추진을 통한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로, 핵 잠재력 강화를 내세운 강경일변도의 김문수 후보와는 차별화된 공약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의 시계은 약 5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던 날에 멈춰서 있고, 소통 채널 복원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남북 당국간 통신선은 두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일방적인 통신선 중단 이후 우리측 정기 통화에 25개월째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1985년 이후 남북간 최장기간 단절 사례에 해당한다.

유감스럽게도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반복적인 분쟁을 겪으면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실패를 거듭해왔다. 지난날 혹자는 남북관계의 허들은 간과한 채 남북간 기술집약적 퀀텀점프(Quantum Jump)를 통한 비약적인 관계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분단 80년간의 지난한 갈지자 행보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들에 대한 망각과 패싱이 아닌 역사적 존중과 원인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남북 소통 채널의 복원은 5년 전 ‘북한은 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가’에 대한 체계적 규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과 분쟁을 겪는 우리의 편견(bias)을 앞세워 저들을 비이성적 국가로 치부하면 간단할 문제를, 저들의 적대인식 속으로 파고 들어가 행위의 동인을 분석하는 것은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다. 2020년 6월 16일 폭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남한의 대북 민간단체에서 뿌린 대북전단은 연락사무소 폭파의 구실일 뿐 본질은 북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라는 군더더기없는 분석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북한 당국의 폭파 행위 근거에 깔린 대남 적대인식의 특질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필자는 세가지 차원의 보론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 번째 원인은 대북비방물과 당국이 지닌 적대인식과의 상관관계이다. 이를 단순히 대북비방물에 대한 북한 당국의 히스테리성(histrionic) 오판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면이 있다. 당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중단(2020.6.9.)과 폭파(2020.6.16.)의 명분으로 주장했던 대북 전단의 경과를 보면, 남북이 상호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문 채택 전후로도 9개 탈북민 및 종교단체 주도로 161차례에 걸쳐 체제 비방물이 살포(2018~2020, PET병 및 전단)되었다. 이미 북한 당국은 2014년과 2019년 사이 관영매체를 통해 9차례에 걸쳐 대북비방물 살포에 대한 대남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기에 일관성있게 축적된 대남 적대인식이 대내외적 폭파의 명분으로 기능했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남북간 통신선이 개통된 1971년 이후 북한의 통신선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나타난 연락기구의 정치화 경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통신선 중단은 한미의 군사적 위협 또는 대북제재, 전단 살포 등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고지도자 위임 등의 담화 방식을 채택, 대외적으로 중단 사유를 명확히 밝혀왔다. 반면 통신선 재개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년사, 정전협정일, 조문단 방문 및 친서 교환, 물자지원 및 고위급 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제의를 계기로 대내외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빌려왔다. 대부분의 경우, 대남 적대 기조를 전환해야 할 명분에 따라 전략적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새 정부는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시 북한 당국이 갈등 국면의 전환을 시도하거나 호응하는 경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원인은 북한 당국이 지닌 연락기구에 대한 기본 인식의 문제이다. 최초 남북 연락기구가 처음 논의되었던 시기에는 상호 물리적 충돌 여부가 기구 운영의 제약 요인이었다. 그러나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부터는 북한 당국의 대남 혹은 대미 적대인식이 협상과정에서 상호 연락기구를 최고 의사결정자의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1994년 12월, 북미 제네바합의 후속합의서 체결에서 합의된 북미 연락사무소 교환의 결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비유컨대 연락기구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계국들 간의 격렬한 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어지는 전리품화된 것이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연락기구 운신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남북간 통신선 중단사례 총 9차례 중 7차례 이상이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원인은 군사지역이었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기구와 관련 비토세력인 북한 군부가 전면에 등장, 폭파 행위를 전담함으로써 부가적으로는 국내정치적인 영향력 건재라는 목적을 의도했다는 점이다. 남한의 대북비방물의 연속적인 전개는 실제 군부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내부 대남·외교라인과의 헤게모니 쟁투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동력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실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평양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최선희 부상이 “군부가 핵포기를 절대 반대한다는 청원 편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수천 건 보냈다”고 언급한 사례나, 북미 제네바 합의에 관여했던

前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린 터크가 북한이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선회한 근거로 군부라인과 외교채널간의 긴장관계를 끝았던 회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美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리 긴요해졌다. 남북간 통신선의 복원은 접경지역에서 발생가능한 유무형의 충돌상황을 관리하는 디폴트값(default value)이다. 새로이 출범할 정부가 북한의 적대인식과 행위 환경을 반면교사 삼아 상호 비방중지와 소통 채널 복원, 그리고 5년전 사건에 대해 대남 유감표명을 단계적·동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북한에게도 이로울 리 없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호혜적 관계로 전환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 본 글은 아주경제 Deep Insight(2025.5.29) 에도 수록되었습니다.

필자 주요 이력

▷ 연세대 통일학 박사 ▷ 통일부 과장(서기관) ▷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연구실장)

## 한미 관세 협상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 ☐ 관세 협상 관련 국제사회 대응 분석,
- ☐ 무조건적 수용 아닌 韓 이익 맞는 의제·조건안 제시해야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주통일연구소장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등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고 그 성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조속한 협상이 여당의 지지율을 올려줄 것이므로 선거 전에 빨리 처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와 호주의 총선에서는 베센트 장관의 주장과 정반대로 미국에 일방적 양보를 거부하는 여당이 모두 승리했다.

지난달 28일 캐나다 총선은 트럼프 상호관세의 정치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대였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자유당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경제 정책 실패로 보수당에 20% 이상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및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은 선거 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반(反)트럼프 여론에 편승한 자유당은 상호관세에 강경한 대응을 주장한 마크 카니 전 캐나다은행 총재를 트뤼도 총리 후임으로 선출했다. 카니 총리는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를 캐나다의 트럼프로 맹렬히 비했다. 그 결과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보수당은 총선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포일리에브르 대표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3일 호주 총선에도 반트럼프 여론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노동당은 물가 및 집값을 잘 관리하지 못해 자유당·국민당 연합에 패할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주에 주력 수출품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를 거부한 3월 이후 반트럼프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를 모방해 정부효율부(DOGE) 도입을

통한 공공 부문 인력 감축 공약을 제안했던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그 결과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노동당에 역전당했을 뿐만 아니라 더튼 자유당 대표도 지역구를 지키지 못했다.

캐나다와 호주에서 반트럼프주의의 승리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월7일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조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타협을 모색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달 17일 첫 실무회담에서 베센트 장관에게 포괄적 합의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2차 실무회담에서 일본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만 24%에서 14%로 인하하겠다는 미국의 양보안을 즉각 거부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3일 세 가지 관세를 모두 인하는 패키지 딜이 아니면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일 협상은 당분간 교착될 것이다.

미국과 빠른 타협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베센트 장관의 주장은 캐나다와 호주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이미 틀린 것으로 증명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2차 실무회담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만 논의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협상 의제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국가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달 대선에서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본 글은 경기일보 오피니언(2025.5.7) 에도 수록되었습니다.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박사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이 글은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아주통일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www.ajou.ac.kr/aiu](http://www.ajou.ac.kr/aiu)

E-mail : [aiu@ajou.ac.kr](mailto:aiu@ajou.ac.kr) Tel : 031) 219-3400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701, 702호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